

“공사대금 업체에 직접 쥐도 임금체불 개선 안돼”

건설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 관련 조사 결과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가 임금 체불 개선에는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하도급대금 체불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와 건설근로 및 자재·정비업체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해도 임금체불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4월 건설연이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임금체불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하도급업체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56.9%로 가장 많았고 이로 인해 공

사대금 체불 개선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57.2%로 집계됐다.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로 공사대금 체불이 증가해 원도급자의 대위변제 등 선의의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는 답변도 61.6%에 달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

강원도, 내년도 국비확보 ‘총력’

강원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기획재정부가 8월 말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하는 만큼 사전에 도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집중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2017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6조 49억원으로 잡았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승화와 불업 조성을 위한 300억원 및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예산 확보가 최대 과제다.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삼척~제천 동서고속도로, 삼척~제천 철도 등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도 더는 미룰 수 없다.

특히 철도, 도로, 항만 등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도의 SOC 시설을 전국 평균 수준까지 확충하려면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 도는 앞으로 지역 출신 재경 공무원과 정치인 등 인적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3년연속 6조원 달성 목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 사업예산 확보 ‘최대 과제’

13일 도·국회의원협의회 개최 8월 전까지 전방위 활동 계획

특히 13일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도·국회의원협의회를 열고 국회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 국회의원 8명과 최문순 지사, 김시성 도의장, 도 실·국장, 여야 도당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국회 개원 후 양측이 갖는 첫 상견례 자리로 앞으로 4년간 ‘조정 협치’ 가능성을 가늠할 첫 시험무대다.

양측은 주요 SOC 사업 추진 및 국비 확보 등을 위한 공조를 강조할 계획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직

접 지원 방안, 접경지역 SOC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특별법, 설악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일경제관광특구법 등 주요 법안의 재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최문순 지사는 앞서 1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경제·복지·사회·행정안전 예산 등 4개 부문 14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65억원), 여주~원주 철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50억원), 동해항 3단계 개발 사업비(1000억원), 혁신 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건립(31억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6일 “현안사업 예산이 부처 안에 최대한 담길 수 있도록 각 실·국별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3년 연속 국비 6조원 시대를 이어가고자 강원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국회와 정부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직불 확대가 건설산업에 끼치는 영향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 체불 개선에 효과없다”

건산연 보고서… 체불 92% ‘하도급-재하도급’ 과정서 발생

정부가 추진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가 체불 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하도급대금 체불은 원-하도급자 사이가 아니라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체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지불 확대가 체불 개선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올해 공공발주 공사부터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따르면, 2015년 원-하도급자 공사대금 체불 발생 건수는 15건(6.3%)이지만, 하도급자-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 간 발생 건수는 무려 222건(92.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업계 종사자(건설현장·공무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중복 응답에 대해 △시장 상황에 부적합(67.9%) △발주자 및 원도급자 업무 부담 증가(44.2%) △대금체불 관행 더욱 커질 우려(24.2%)가 있다고 응답했다.

체불 원인은 △하도급업체 귀책(56.9%) △하도급업체 불성실한 행위(18.3%) 등이 라고 응답했다.

공사대금 체불 개선 효과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17.5%) △도움되지 않는다(39.7%) 등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과반수(57.2%)를 넘었다. 반면 △매우 도움된다는 응답은 0%로 나타났다.

체불 개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원인(중복 응답)으로는 △하도급업체와 2차 협력자(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관계에서 발생(39.5%) △하도급업체 재정능력 부족으로 체불 양산 가능성(27.7%)을 꼽았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원도급자 파산과 같은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건산법과 하도급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공정위와 기재부가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것은 관련 법령 취지에 어긋나고 사적 자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등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져 공사관리 효율이 떨어진다. 특히 체불은 부실·부적격 업체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퇴출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